

민주당 쪼개지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공천배제를 확정해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최고위는 6일 열린 회의 결정문에서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MB 악법'을 막아낼 힘이 있는 아량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판가를 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정 삼임고문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 삼임고문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으로서 당내 단합과 반(反)MB 정서의 굳건한 구축을 위해 애당직 결단을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위의 이날 결정은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 시 재보선 승부처인 인천부평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5대 국회 정계입문 이후 줄곧 한배를 탔던 '13년 동지'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등을 돌리게 됐다.

줄곧 명분과 원칙을 내세웠던 정 대표는 "공천 배제"라는 극약처방을 꺼냈고, 이에 맞서 정 전 장관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태세다.

정 대표는 4·29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인생 최대 고비를 맞게됐고 정 전 장관도 무소속 출마 시 당을 버렸다는 부담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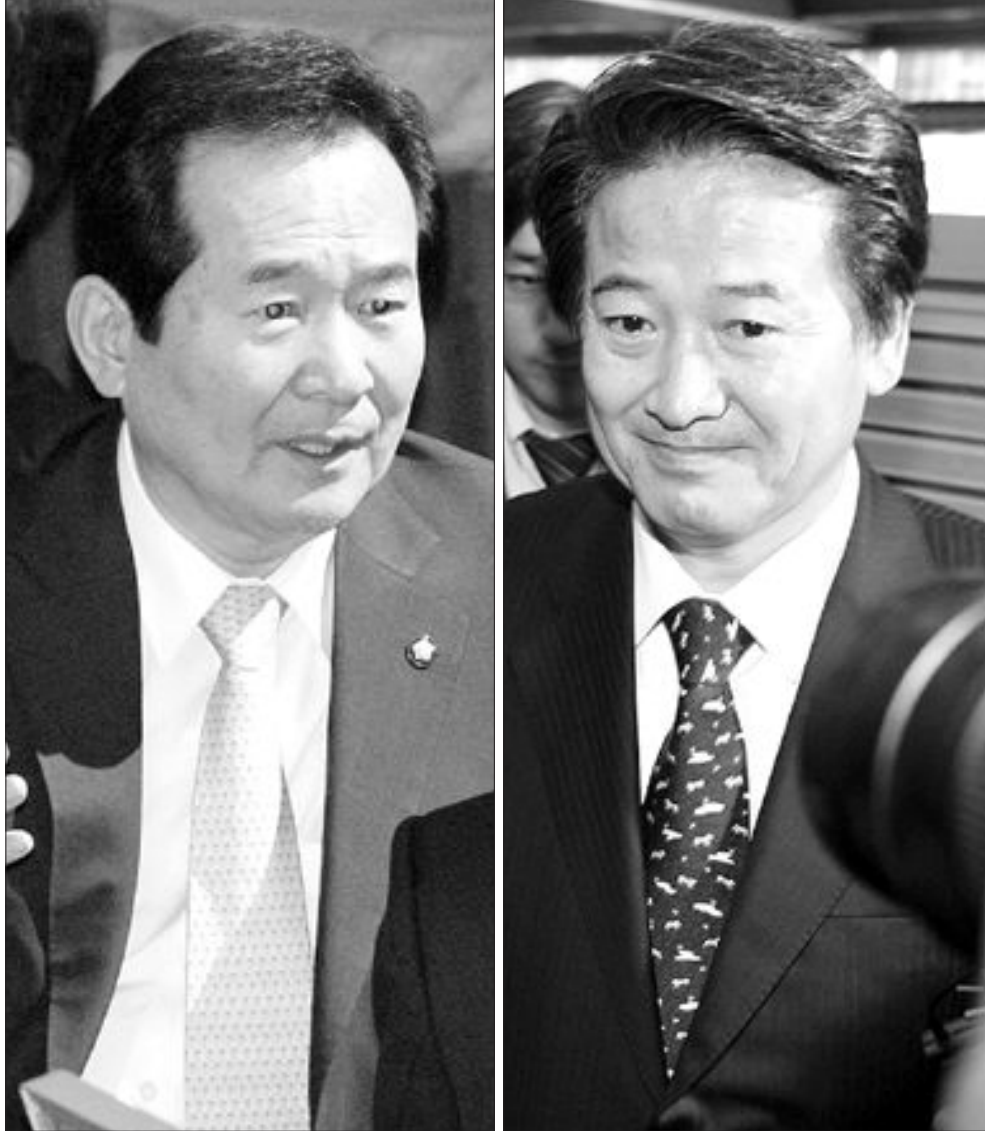
정 전 장관은 이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교경전이 생각난다"는 말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는 외길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창당 주역으로 참여, 대주주로 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이자 자신을 대선후보로 뽑아준 '친정'을 등졌다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그의 출마 명분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출마 과정에서 갈등을 촉발시킨 데 이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6년 만에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정치적 입지는 당분간 위축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당내 여론을 지켜본 뒤 2~3일 내 탈당계를 제출한 뒤 무소속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내 특별한 대항마가 없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대중적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당 밖에서 비주류의 구실을 자처하다가 복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 전 장관의 공천 배제에 대해 비주류 인사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공천 갈등 사태는 당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변질 조짐이다. 정 전 장관을 비롯해 공천을 주장해온 중진들과 친 정동영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공천 배제 후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동영 공천불가' 입장을 최종 확정된 6일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막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정세균 대표(왼쪽)와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4선 중진의원들과 만난 정동영 전 장관. /연합뉴스

최고위 정동영 공천 배제키로 결정 중진모임 반발... 鄭 무소속 출마 시사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모임인 '중진 모임'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의 공천 배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위가 애당직에서 비롯된 우리 중진들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정 전 장관 공천 배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강창일, 김재균, 김희철, 문학진, 박기춘, 박영선, 안규백, 안민석, 우윤근,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주승용, 최규식, 최문순 의원 등 친 정동영계 의원 15명은 이날 당 지도부에 "이번

공천 배제 결정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재보선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계파 투쟁'을 빚으며 재보선 이후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와 민주당이 재보선의 승부처인 인천 부평을에서 패하고 정 전 장관이 무소속 출마해 당선 될 경우 이번 공천 갈등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비등해지며 정세균 대표 체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칼끝 노무현 정조준

강금원 소환 '봉하' 70억 투자 집중 수사

박관용 소환 이어 이번주 김원기 조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일부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예고했던 대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이날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원기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난 김택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하는 등 전직 정치인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선유 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칼끝을 노 전 대통령으로 정조준했다.

◇전직 거물 정치인 조사=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께 박 회장으로 1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이진복 부산 동래구청장의 재선 출마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는 실패한 이 전 구청장은 18대 총선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

선, 한나라당으로 복당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에서 박연차 회장이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든 두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도 "2006년 박 회장이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후원금을 받았지만 정계 은퇴한 이후였으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김택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체포한 데 이어 이번 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및 경남·김해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4~5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이번 달까지는 전직 정치인과 지자체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 노무현 주변 수사 '최대 분수령'=검찰의 수사 2라운드 핵심은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수사. 특히 홍콩 사법당국에 요청한 박

회장의 홍콩 계좌 주적 결과가 이번 주 도착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수사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인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이날 강금원 창신선유 회장을 소환해 봉하마을 개발을 위해 설립된 ㈜봉하에 70억원을 투자한 명목과 '3차 회동'에서 이뤄진 논의 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 주 중으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와 정삼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5월 현역 의원 수사 '마지막 고비'=검찰은 5월부터는 현역 정치인과 검찰·경찰·법원 간부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회기 중에도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4월 말까지 이번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일정상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쟁 거수기 노릇했다"

이정현 의원 '고해성사'

초선이자 호남 몫의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도외시키고 권리를 찾았다는 '고해성사'를 하는 한편 호남의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공개 인사청탁'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세비 매달 잘 받고, 후원금 넉넉히 모으고, 당선 축하연·환영연 화려했으며, 특권층 예우·대접 깎듯이 받았다"며 "하지만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이나 대안에 집중 안 했고, 화합보다 분열 언행이 더 많았으며 바람직한 정치경쟁 하지 못했고,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반성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공개적인 인사 청탁 : 탕평이 화합책'이란 소재의 질문에서 "정권 교체로 인한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호남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공개 인사청탁을 한다. 탕평인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북 특사 파견하자"

정두언 의원 공개 제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대북특사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친이계 정두언(사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지금 못할 게 없다"며 대북특사론을 공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북특사로 이제오 전 의원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대북특사를 맡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나는 전문성도 없고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희룡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대북특사를 보낼 수 있고, 보내야 한다고 본다"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대북특사론이 확산되는 것은 강경책만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 모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D) 전면 참여 등 정면대응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지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or '남성강한 힘' (Men's Strong Power) featuring a 'QUIZ' and '남성강한 힘' (Men's Strong Power) product. The advertisement includes text about health benefits, a quiz,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duct.